
청년구직자와 기업 間 ‘수요 불균형’ 현황과 대책

2017. 1. 19

김초원 객원연구원 (qmtl7942@gmail.com)

요 약

1. 청년 실업자 현황 / 1
2. 청년구직자와 기업 間的 수요 불균형 발생 요인 / 3
3.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대선공약 과제 / 7

보고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 약 》

- [청년 실업 현황] 청년실업률은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학력 청년 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청년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의 수요 불균형 현상 심화
 -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환경의 격차로 인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 실업을 선택하는 청년층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일자리 미스매치 요인]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지만, 국내 대학 진학률은 69.8%로 매년 고학력자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고학력자일수록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인 '미취업'을 선택하는 경향 高
 - 장기불황으로 인해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음
 - 중소·중견기업의 신입사원 높은 이직률이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
 - 일자리 질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20대 ▲전문직 ▲고학력층일수록 중소기업 선호도 낮음
-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대선공약 과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 완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 및 장기재직 유도 정책 마련,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설정 등이 요구됨
 - 野 대권주자들의 규제 및 임금 상승을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4차 산업 혁명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하여 청년 실업 문제 이슈를 선점하여야 함
 - ※ 이상의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4차 산업 일자리센터 설립

1. 청년 실업자 현황

○ 15~29세 청년실업률 최근 5년간 상승세 유지

- 2016년 11월 청년실업률은 8.2%를 기록하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으며, 청년 취업자 수는 3년 3개월 만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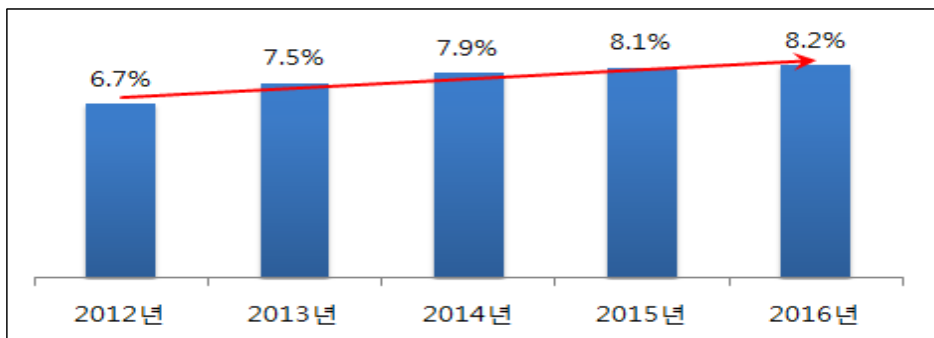
※ 2016년 10월 청년 실업률(8.5%) 또한 동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 (8.6%)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 기록

- 실업자 숫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취업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에 달함¹⁾

- 취업난 속에서도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 불균형’ 때문에 기업은 산업 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3만 6933명으로 2014년보다 1.5%p 증가

[그림 1] 11월 청년 실업률 추이(15~29세)



출처 : 통계청

1) 이준형 (2016).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VIP 리포트 16-20).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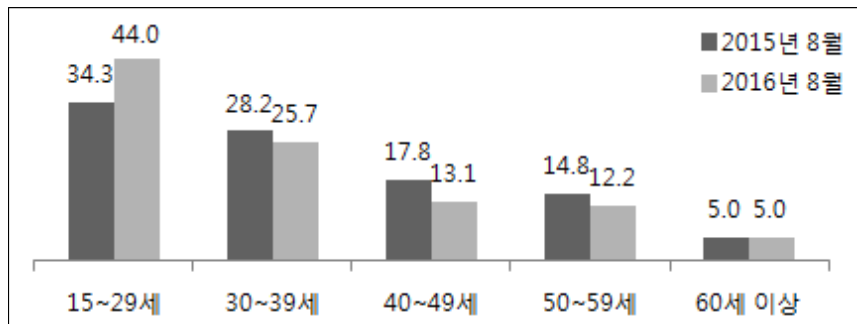
○ 고학력 청년 실업자 비중 증가

- 통계청에 따르면 '16년 3분기(7~9월) 전체 실업자 98만5천명 中 ▲전문대 졸업자 이상 44.5% ▲4년제 대졸 실업자 31.9% 차지
- 고학력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 공급되는 일자리는 상당수가 하위 일자리로 자발적인 실업을 통해 장기실업 상태에 머무르며 취업준비 등의 기간을 가짐

○ 장기 실업자 비율 中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청년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44%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의 장기실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동월 대비 9.7%p 증가하여, 전체 연령에서 청년층만 유일하게 장기실업자가 증가함
-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기실업 상태를 지속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청년 장기실업자는 증가할 전망

[그림 2] 연령별 장기실업자 비중 (단위: %)



출처 : 통계청

2. 청년구직자와 기업 간의 수요 불균형 발생 요인

① 고학력자들의 자발적 미취업

- 국내 대학 진학률은 69.8%('16년 8월)로 매년 많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영역 발생
- ※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45.0%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지만, 관리·전문·기술직 비율은 가장 낮은 21.6%에 불과
- 고학력자일수록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시·전문 자격증 취득 대학원 진학 등으로 자발적인 '미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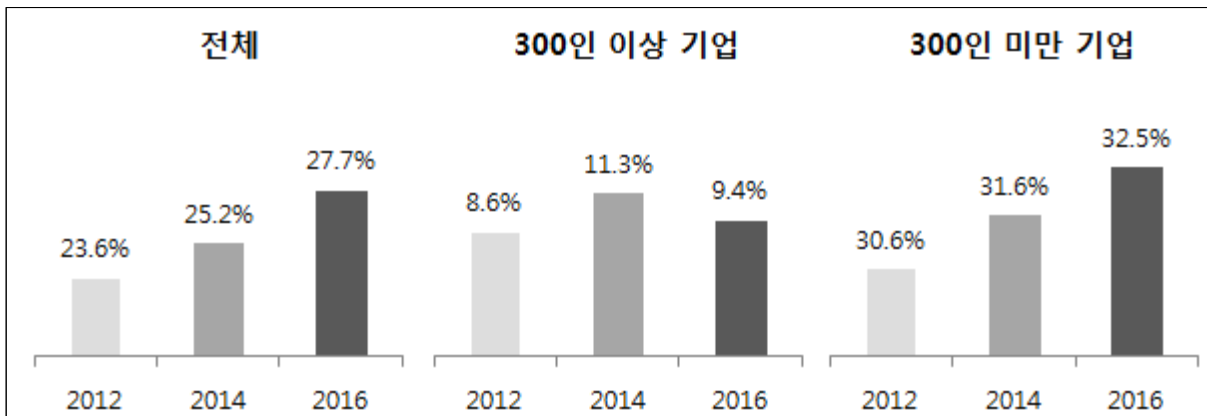
② 장기불황으로 인해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

- 장기 불황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기업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경력직 구직자를 선호하여 청년들의 취업기회 감소
- 신입사원 교육 투자에 대한 부담, 조기퇴사로 인한 손실 우려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기피
- '15년 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 중 경력직 비중 45%, '16년과 '17년 채용 예상인력에서도 기업들의 경력직 비중은 48%에 달함
- 올해 등록된 경력직 채용 공고 건수가 16만 5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60% 가까이 늘어남

③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높은 이직률

-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퇴사율은 감소한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퇴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3.1%p의 격차를 보임
-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83.8%는 이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대기업 취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일시적으로 취직하는 구직자는 37%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인원이 발생하는 사유는 '인력의 낮은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26.8%)로 높은 이직률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하는 요인임
-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아 이직·재취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높고, '취업 반수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및 유출문제 심각

[그림 3] 신입사원 퇴사율



출처 :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④ 일자리 질의 양극화 심화

- 통계청의 '2016년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업체와 대형업체의 ▲임금 ▲복지수준 ▲고용안정성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사업체규모별 시간당 임금격차는 지난해 기준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 업체의 39.3%에 불과
 - 고용안정성 수준과 비자발적 이직률의 격차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 복지환경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보험가입률과 노동조합가입률의 격차도 크게 나타남
- ※ 사회보험가입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
- 고용노동부의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의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원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고(16.6%)', 구직자들은 '기업체가 제시하는 임금·근로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25.3%)'이라고 응답

<표 1> 사업체규모별 일자리 질 비교

	대형 사업체 (300인 이상)	소규모 사업체(1~9인)
사회보험가입률	95.0%	40.8%
노동조합가입률	38.4%	1.5%
고용안정성 수준 격차	11년	2.9년
비자발적 이직률	13.8%	23.2%

출처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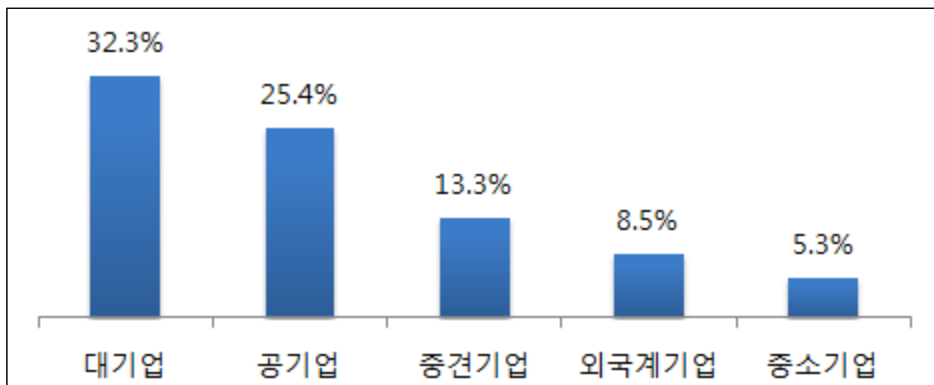
⑤ ▲20대 ▲전문직 ▲고학력층일수록 낮은 중소기업 선호도

- 중소기업중앙회의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합인식도는 20대, 전문직, 고학력층일수록 낮게 나타남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인식도는 100점 평균 54.0점으로 대기업(71.3점)의 75.7%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자아실현 인식도는 100점 평균 54.9점으로 대기업(67.5점)의 81.4% 수준임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6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생 3461명 가운데 단 5.3%만이 중소기업 선호

[그림 4] 2016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낮은 급여 ▲열악한 재무상태 ▲열악한 복지·근무환경·조건 등으로, 적은 임금보상체계와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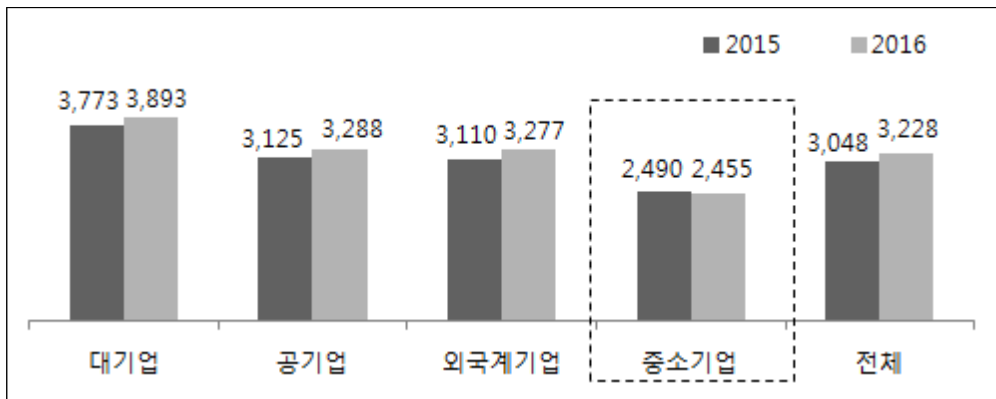
☞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청년구직자와 기업 간의 수요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3.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대선공약 과제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근무환경 격차 완화 방안 마련

- 전국경제인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희망 연봉은 3,464만원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상대적 저임금(2,490만원) 해결 필수

[그림 5] 2016년 신입사원 평균 연봉 (단위: 만원)



출처 : 잡코리아

-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하여야할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장점과 개선된 근무환경이 68.1%로 나타나²⁾,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됨
 -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 및 장기재직 유도 정책 마련 시급 편향된 직업 선호 개선을 통해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의 수요 불균형 개선 필요
- ☞ 청년 실업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무환경 격차 완화가 관건

2) 2016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중기청·중기중앙회

○ 중소기업 고용지원 확대 및 장기재직 유도 정책 마련 시급

-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세제 혜택 ▲복지 혜택 등의 정책을 통해 장기재직을 유도 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인재 양성 지원 등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필요

○ 청년 실업 안정화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설정 필수

- 野3당의 청년과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마다 상이함
 -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률 확대 ▲청년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급 ▲청년 근로자 미채용 기업에 고용부담금 부과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 등
- 野3당이 발의한 청년 일자리 관련 법안들 중 4.13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있음
 - 더불어민주당 :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 3%→5% 상향,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 국민의당 : 공공기관 의무비율 5% 상향,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 기업 확대 도입, 청년스타트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 정의당 :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 새누리당은 野3당에 비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이 부재하여 청년 고용·채용·취업 관련 정책 방향의 통일성 필요

○ 野 대권주자들은 규제와 임금 상승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문재인 전 대표 “공무원 충원·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까지 끌어올리고 공무원 충원·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과 원·하청 공동책임, 사유제한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 격차 해소
- 과거 2012년 대선에서는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 제시

- 이재명 성남시장 “초과근로 금지로 일자리 창출”

- 연장 노동시간 포함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여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 박원순 서울시장 “공공부문 정원 채우면 일자리 100만개 가능”

- 소방·경찰·사회복지·식품감지 공무원 등 정원 미달인 공공부문의 정원을 채우고, 총액임금제를 늘려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

- 안희정 충남도지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좁힘으로써 일자리 양극화 문제 개선

☞ 야권의 규제와 임금 상승 공약에 대응하여, 우리 당은 새로운 프레임 제시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이슈를 선점하여야 함

○ 4차 산업 일자리센터 설립을 통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주요 선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

※ 獨 ‘인더스트리 4.0’, 美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中 ‘인터넷 플러스’

- 4차 산업혁명 담당기관을 구성하고 산하에 4차 산업 일자리센터를 설립하여 미래 일자리 고용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 범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아젠다를 수립하여, 필요한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결책 제시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증가하게 될 ▲스마트카 ▲가상현실 ▲3D프린팅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등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청년구직자가 구직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대선 공약으로 4차 산업 일자리센터를 통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표 2> 4차 산업 일자리센터 청년 취업 지원 방안 예시

사업	내용
4차 산업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산업현장 교수 실무강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4차 산업 분야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분야 직업상담 전문가 배치 · 상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업 연계 인턴 프로그램 지원
훈련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교재 및 훈련 장소 무상 제공 · 참가자 교통비·식비 일부 지원